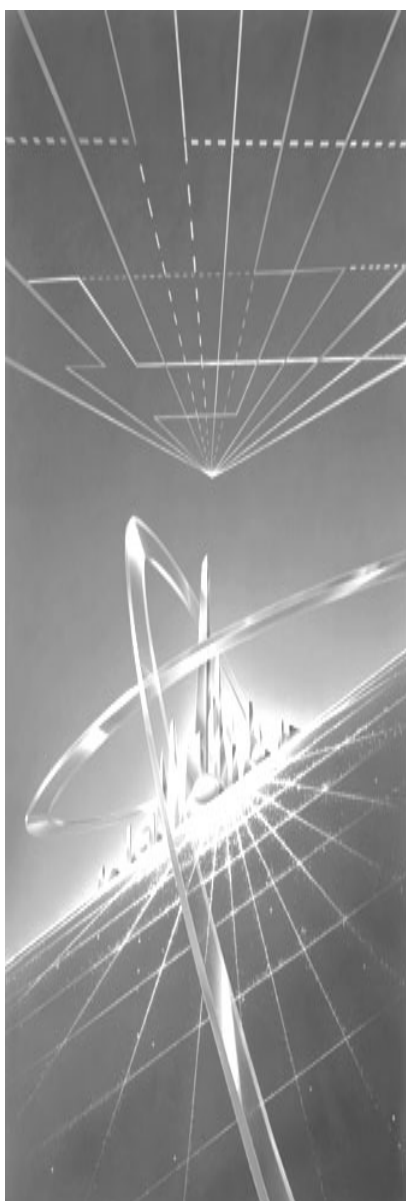




건설동향브리핑



제 96 호 (2005. 9. 1)

- 경제 : 건축 허가 면적 2개월째 감소
2005년 지가 합산액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 정책 :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주요 내용
- 이슈 : 대북 200만KW 송전 가능성과 대안 검토
업역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
- 정보 : 해외 설계분야 건설 시장의 동향
- 논단 : 「건산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현실 반영해야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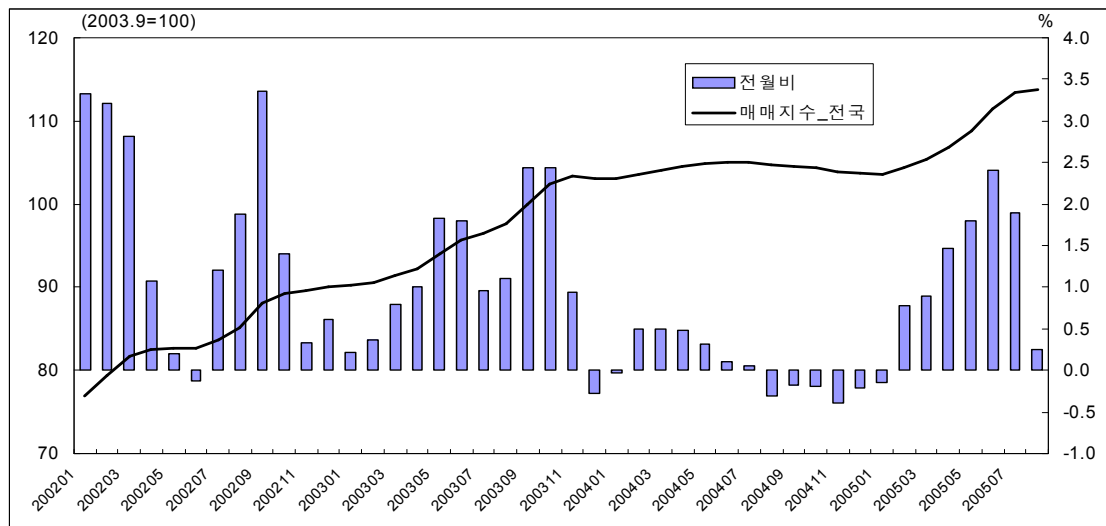
■ 뉴타운 3차 후보지 9곳 선정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지구 후보지 9곳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최근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한 3차 뉴타운 및 균형 발전 촉진 지구 신청 지역 38곳 가운데 뉴타운 후보지 9곳과 균형 발전 촉진 지구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3차 뉴타운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송인동,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수색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금천구 시흥동, 영등포구 신길동,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신림동, 송파구 거여·마천동이며, 촉진 지구 후보지는 광진구 구의·자양동, 중랑구 망우·상봉동, 강동구 천호동 등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 지구는 24곳으로 늘어났다. 거여·마천동은 강남권의 첫 뉴타운 후보지로 정부가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 손꼽는 특전사 부지 등과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 과정이 주목된다.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왔으나 8월에는 크게 둔화됨.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던 수도권 지역도 0.3% 증가함.
- 서울지역에서는 강북이 0.5% 증가한 반면, 강남지역은 0.1% 감소함.
- 이는 정부의 831 대책을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동산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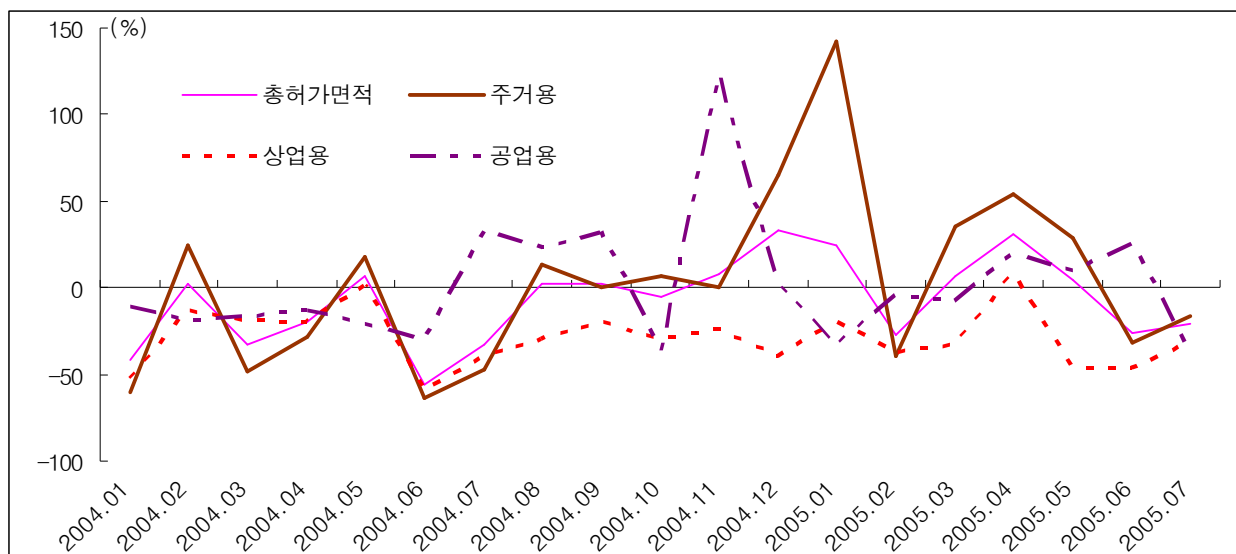
건축 허가 면적 2개월째 감소

- 경기도 지역 7월에만 46.3% 감소 -

■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 2개월째 감소세 지속

- 2005년 7월 건축 허가 면적은 1,008만 9,000㎡로 나타남.
 -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2%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함.
- 용도별로 보면 주거, 상업, 공업 부문이 모두 감소함.
 - 주거용의 경우 3~5월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나 6월과 7월에는 다시 감소함.
 - 공업용(-37.1%)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상업용도 31.6% 감소함.
- 지역별로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감소가 두드러짐.
 -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년 동월비 18.1%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46.3%나 감소했기 때문임. 반면 지방은 3.5% 감소함.
- 1~7월까지 누계로는 전체적으로 3.2% 감소함.
 -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은 11.5% 증가하였으나 상업용의 경우 30.5%나 감소하였으며, 공업용도 8.4% 감소함.

2005년 상반기 용도 지역별 지가 상승률 추이



자료 : 건설교통부.

2005년 지가 합산액

- 2005년 평균 지가 변동률 크게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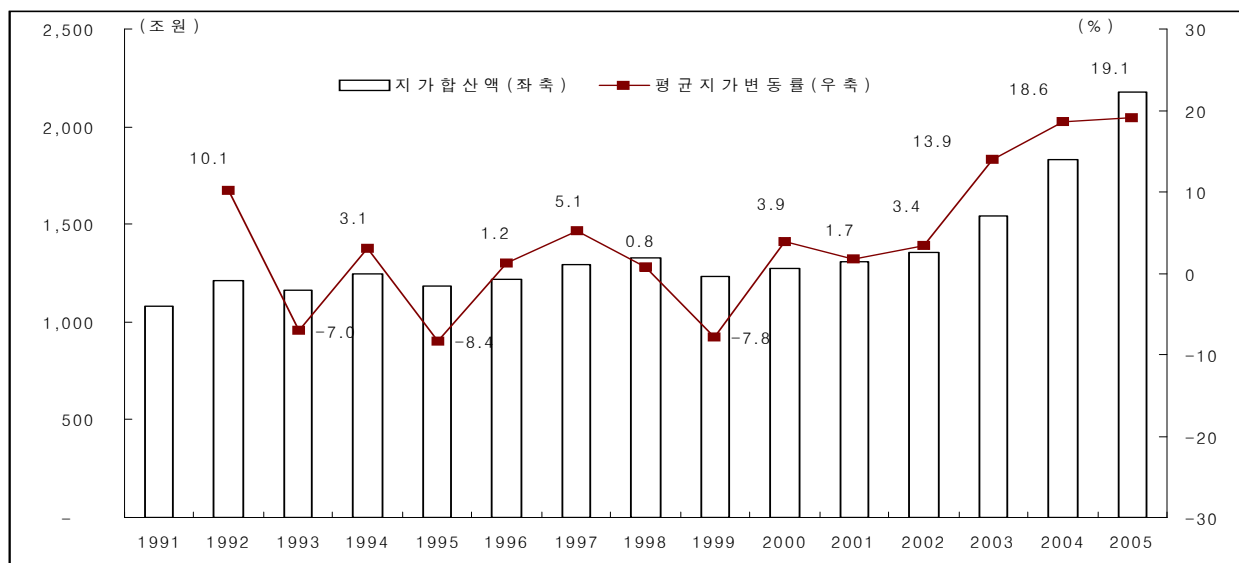
■ 지가 합산액 6년째 상승

- 2005년 지가 합산액은 총 2,176조원임.
 - 지가 합산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6년째 상승하고 있음.
 - 지가 합산액은 2003년 이후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여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 2,000조원을 넘어섬.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지가 합산 비중이 더욱 증가함.
 - 수도권 지역은 면적으로는 전국의 11.8%에 불과하나 지가 총액으로는 62.5%나 차지함.
 - 이는 2004년(61.0%)에 비해 1.5%p나 증가한 수치임.

■ 경기도와 충청도 지가 크게 상승

- 지역별 평균지가도 6년째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세 또한 확대되어 2005년에는 19.1%나 상승함.
 -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전년 대비 각각 35.5%, 34.9%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반면 평균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3.7%)로 나타남.

지가 합산액 추이



자료 : 건설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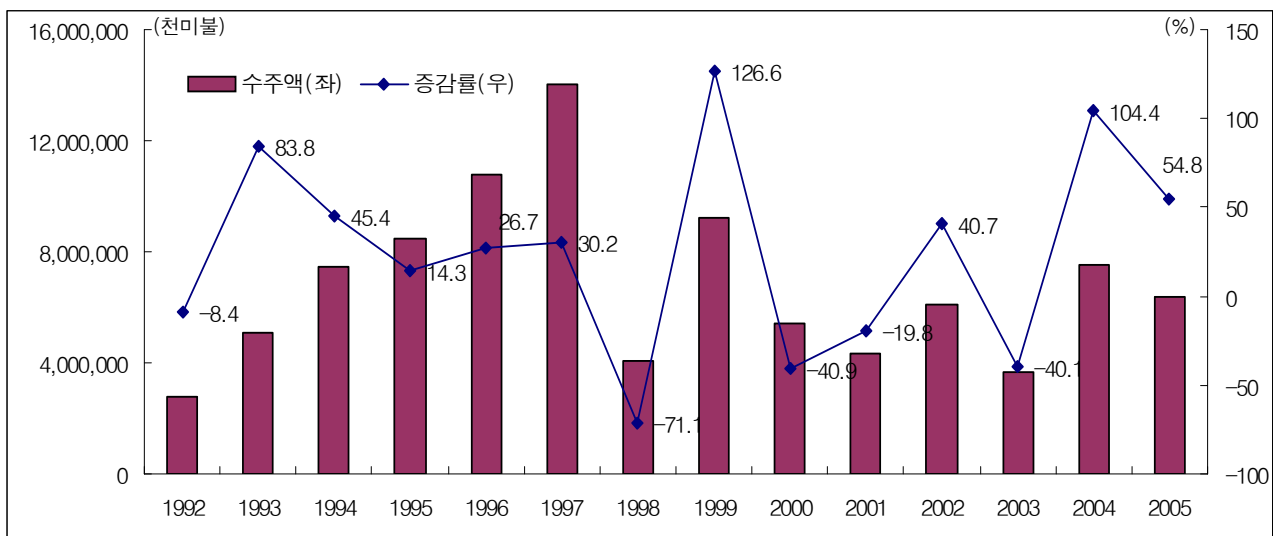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 지속 -

■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지역별로는 중동지역 크게 증가

- 2005년 8월 30일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64억 1만 달러임.
 -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4.8% 증가하여 2년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해외건설 수주액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40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부진을 지속하여 왔으며 2004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 왔음.
-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감소하였으나 건축과 산업설비 부문의 수주가 크게 증가함.
 -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설비의 경우 95%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7%로 크게 높아짐.
-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지역은 감소하였으며, 중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수주는 증가함.
 -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108.0%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21.7%p 증가한 69.3%로 높아짐.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강민석(책임연구원·mskang@cerik.re.kr)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주요 내용

- 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 부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소보원 및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7,000여건에 달함)하자 공정위는 올 4월부터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하여 피해실태 파악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함.
-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주된 소비자의 피해 유형을 보면,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 대금의 손실, 상품 정보의 부족(조망권, 수익률 등의 허위·과장 광고), 입주 이후 하자발생 빈번, 사업자 담합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사업자 부도로 인한 임대 보증금 손실, 각종 임대주택 관련 불공정 계약 및 관행 횡행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하자 발생이나 품질 확보 부분은 현행 감리제도, 하자보수제도 등의 제도로 시장 경쟁을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부도 → 금융기관의 담보권 행사를 위한 경매 절차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정부의 개선 방안

- 선분양의 문제점 개선
 -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 대금의 손실 피해는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제도시행에 따른 분양 질서의 공정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장 감시 및 엄정한 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함.
 - 선분양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의 경우는 건교부가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후분양제를 활성화할 계획이어서 그때까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정보의 비대칭 및 불균형의 해소
 -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 분양 관련 중요 정보를 지자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클린애드 네트워크(Clean Advertisement Network)도 구축토록 함.
 - 공정위는 2005년 하반기까지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부동산 분야 표시·광고수칙 제정 및 사업자 교육, 소비자단체의 광고 모니터링 지원, 민간 광고심의기구의 자율 심의를 활성화함.

- 주택 품질 향상 유도
 -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시행 및 주택품질 보증제도(Home Warranty)의 도입 추진
 - 건교부는 2006년 상반기에 공동주택의 주택 품질과 주거 환경 등을 평가하여 분양 공고 시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택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성능표시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 임대주택 관련 소비자의 피해는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등 2005. 6. 7의 건교부 대책으로 피해방지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나아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주택기금 대출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건교부가 병행 추진키로 함.
-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
 - 2005년 하반기에는 주요 임대아파트, 상가건물 사업자의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료 인상, 임대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등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고, 2006년 내에 지자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함.

■ 시사점

-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는 그 규모나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대책 발표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선분양 시장하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거래에서의 중요성, 소비자의 신뢰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마련된 법령의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도입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주택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의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지나치게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할 경우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품질보증제도의 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임.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대북 200만KW 송전 가능성과 대안 검토

- 대북 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8년도 남한의 설비 예비율은 22%로 200만KW를 송전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임. 송전을 하게 될 경우 2008년도 전력예비율은 약 19% 정도로 추정됨.

■ 200만KW 송전 가능성 검토

- 국내 전력수급 계획은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확정됨.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을 결정짓는 주요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 목표임.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2002년도에 확정된 것임. 조만간 “제2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에는 정확성 여부를 떠나 200만KW 대북 송전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함. 만약 기존 계획에서도 200만KW 추가 수요를 덜어내도 문제가 없다면 기 수립된 기본계획이 과다한 수요를 추정했다는 결과임. 국내 원자력 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200만KW 과다 추정은 결국 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 가능함.
- 200만KW 용량의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과 200만KW 송전을 하겠다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2004년 기준으로 국내 발전소의 평균 설비 이용률이 66% 정도로 200만KW를 상시 공급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발전소를 짓게 되는 경우 100만KW가 추가되어 300만KW 설비 용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와 같이 해석될 수 있음.

■ 남·북한 전력 규모와 활용방식 비교

- 남한의 설비용량은 2004년 기준으로 5,996만KW이지만 북한은 2003년 기준으로 777만 KW로 설비 용량 면에서는 7.7배 차이가 나지만 실제 발전량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17.5배 정도로 높은 편임.
- 남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름(보통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최대 수요가 발생되지만 북한 지역의 경우 겨울에 최대 수요가 발생함. 일일 최대 수요는 남한지역에서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지만 북한지역에서는 오후 7시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알려지고 있음.

■ 2013년 예비 전력 유지와 수급 계획에 잠재된 문제점

-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협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받기 시작하는 해는 2013년

도부터임. 2013년 발전소 설비 계획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발전소는 가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됨.

- 2013년도는 적정예비율이 17%에 근접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제한을 받게 되어 제한 송전을 하게 된다면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 대북 송전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반발이 예상됨.
- 200만KW 송전을 개시하게 될 경우 남한측 판단에 의해 일방적 송전 중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안을 찾아내고 또 대책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유 및 경제적 이점 진단

- 북한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 정도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확인됨.
-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남한지역의 여유 전력을 공급한다는 점과 북한경제를 도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으로 해석됨.
-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북한지역을 남한의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 북한의 인건비는 중국 경제특구지역의 50% 이하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송전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안 검토

- 북한지역 중 대량의 소비지역과 최대한 근거리에 위치한 양수 발전소 건설 가능 지역을 조사해 용량 30만~40만KW급의 양수 발전소를 8~10기를 건설하는 대안을 검토. 남한의 기술과 장비, 북한의 노동력이 상생할 수 있으며 남한의 원전과 북한의 양수 발전이 호혜적 관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북한지역 내 모든 발전소 설비의 용량과 성능 진단, 송전과 배전망을 전면적으로 조사·분석 후 북한 국가 차원의 장기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남북한이 협력하여 북한 경제 인프라 동력원을 건설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고 동의가 필요함.
- 남·북한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는 북한경제 성장이 필수적인데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초 에너지 확보에 있음. 따라서 남한 경제인들의 투자를 촉발하기 위해서도 전력 생산 시설 확충은 필수적임.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업역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

■ 조사개요

- 조사 내용 : 업역제도의 평가, 제도개선 방안, 향후 예상 효과 등 30여 문항
- 조사 대상 : 건설업체 191개사, 공공 발주기관 21개 기관, 대학교수 등 전문가 56명

■ 현행 업역제도에 대한 평가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영업범위 제한 및 겸업금지에 대해 건설업체의 38.4%는 건설업체간의 기능 분화에 이바지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공공 발주자 등은 16.9%에 불과
- 공공 발주자 등의 48.1%는 현행 업역 제도가 칸막이식 규제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응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및 겸업금지에 대한 평가

(단위 : %)

응답 내용	업체	공공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기능 분화에 이바지	38.4	16.9
칸막이식 규제로 인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23.2	48.1
다양한 회피수단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음	15.3	16.9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11.3	16.9
복수 업체의 운영이 불가피하여 운영비 증가	11.9	1.3
합 계	100.0	100.0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 허용 여부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점진적으로 겸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38.2%인 반면, 공공 발주자 등의 40.3%는 원칙적으로 겸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경쟁 촉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겸업 금지를 지지하는 업체는 24.2%, 발주자 및 전문가는 18.2%로 나타남.

겸업 허용 여부

(단위 : %)

응답 내용	업체	공공
점진적 확대	38.2	23.4
원칙적 전면 허용	21.8	40.3
겸업 전면 허용	15.9	18.2
현행 유지	17.1	9.1
전면 금지	7.1	9.1
합 계	100.0	100.0

■ 업종 구분 방향

- 업종의 구분은 시장구조의 변화 및 기술적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업종의 통합과 함께 새로운 업종을 분리·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공공 발주자 등의 63.2%가 업종의 통합과 분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적극적인 업역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

업종 구분 방향

(단위 : %)

응답 내용	업 체	공 공
통합 및 신설 병행	36.9	63.2
업종 통합	40.3	19.7
현행 유지	14.2	3.9
현재보다 세분화	8.5	13.2
합 계	100.0	100.0

■ 겸업 확대 의사

- 겸업이 허용되면 전문건설업종으로 적극 진출하겠다는 일반건설업체의 비중은 11.3%로 나타났고, 상황을 보고 진출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50.3%를 차지하여, 대부분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임.
- 23.2%의 응답자들은 진출 가능성이 작다고 했고, 7.9%는 진출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여 약 1/3의 업체는 수주 불투명 등의 이유로 전문업종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건설업종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문업체의 응답비중이 55.1%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전문업종으로 진출 의사

(단위 : %)

응답 내용	응답 비중
적극 진출	11.3
진출 검토	50.3
잘 모르겠음	7.3
진출 가능성 희박함	23.2
진출 의사 없음	7.9
합 계	100.0

■ 조사결과의 함의

- 그동안 진입장벽 등의 폐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온 업역제도는 기업간 분업화 등에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장과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됨.
-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대부분의 업체는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이며, 1/3 정도의 업체는 의사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해외 설계분야 건설 시장의 동향¹⁾

- 해외 매출 실적을 기반으로 ENR이 선정한 2004년 상위 200대 설계사²⁾들의 총 해외매출액은 241.5억 달러(약 24조원)로 2003년 209.9억 달러(약 21조원)에서 15.1% 증가함.
 - 2004년 해외시장의 매출액은 2002년의 매출액 188.6억 달러에서는 무려 28.0% 증가한 수치임. 지난 8년간 금융위기, 테러, 전쟁, 사스 및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건설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됨.
 - 한편 2004년의 환율 변동은 이러한 해외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침. 달러에 대한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 상승은 유럽 및 일본 기업의 매출 증가로 나타나게 됨. 유럽의 설계기업은 2003년 매출액과 대비하여 18.6%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일본 기업은 18.9% 증가를 기록하게 됨. 반면 미국 기업의 매출은 5.5%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설계분야 해외 건설시장의 호황은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캐나다 설계분야의 시장은 2004년 가장 큰 매출 증가를 보였는데 전년도 매출액보다 27.2% 증가한 15.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2004년 매출 규모는 60.7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25.3%의 증가를 보임.
 - 중동시장은 전년도 대비 21.2% 증가한 24.3억 달러의 매출 규모를 보임.
 - 아프리카 지역의 매출은 2003년의 매출 규모에서 24.4% 증가한 25.2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2002년 매출액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남미의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매출액도 11.7%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지역별 해외시장 매출 추이

연도	매 출				(백만 달러)				
	캐나다	미국	중남미	카리브 연안	유럽	중동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기타
2002	1,127.5	2,716.0	1,159.1	321.3	5,493.6	1,666.4	4,419.5	1,228.6	731.8
2003	1,217.3	2,490.0	912.4	331.3	7,101.0	2,046.6	4,863.1	2,028.2	4.4
2004	1,548.4	2,759.5	1,085.9	296.4	7,440.1	2,429.0	6,072.6	2,522.7	5.9

1) 「The Top 200 International Design Firms」(ENR, July 25, 2005)에 수록된 내용 재구성.

2)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는 '순수 설계회사(E, EA)'와 '건설기업(EC, EAC)'이 있음. 본문에서 사용되는 '설계사', '건설기업', '기업'은 이를 지칭하는 것임.

- 2001~2002년 건설경기가 침체되었던 미국 시장은 안정적으로 재기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한 27.6억 달러의 매출을 보임.
- 반면 유럽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4년 매출은 2003년에서 5.5% 증가한 74.4억 달러에 그침.
- 한편 사업 분야별로는 발전, 교통시설, 수자원 분야의 감소하던 매출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중 관심이 커지고 있는 수력발전 분야는 유망 분야로 지목됨. 또한 석유 및 가스 관련 시장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2004년 해외시장의 주요 양상

-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 지역과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2003년에 이어 사업 확장과 신규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되고 있음.
-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컨설팅 및 시스템 보증회사인 Breau Veritas는 최근 미국 기반의 Berryman & Henigar와 U.S. Lab을 인수하였음.
- Dutch Arcadis는 미국 기반의 Construction Dynamics Group과 런던 기반의 AYH plc를 인수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영국 기반의 AMEC plc는 Metz, PK SAS, NNC Holdings Ltd.의 세 기업을 인수하였음.
- 해외시장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해외사업 매출에 따른 상위 10대 설계사

순위		회 사 명	회사 형태	2004년도 매출(백만 달러)	
2004	2003			해외 매출	총매출 중 해외 매출(%)
1	3	FLUOR CORP., Aliso Viejo, Calif., U.S.A.	EC	1,794.0	79
2	1	SNC-LAVALIN INTERNATIONAL INC., Montreal, Quebec, Canada	EC	1,493.3	56
3	6	AMEC PLC, London, U.K.	EC	1,346.0	91
4	4	KBR, Houston, Texas., U.S.A.	EC	1,179.9	83
5	5	FUGRO NV, Leidschendam, The Netherlands	GE	1,144.0	91
6	7	ARCADIS NV, Arnhem, The Netherlands	E	721.0	65
7	2	ABB LUMMUS GLOBAL, Bloomfield, N.J., U.S.A.	EC	710.8	99
8	9	JACOBS, Pasadena, Calif., U.S.A.	EAC	590.4	30
9	8	BECHTEL, San Francisco, Calif., U.S.A.	EC	582.0	37
10	11	AECOM TECHNOLOGY, Los Angeles, Calif. U.S.A.	EA	578.1	28

* 해외 사업 매출액만으로 선정한(자국내 매출 불포함) ENR지의 200대 설계분야 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

* E : engineer, EC : engineer-contractor, EA : engineer-architect, EAC : engineer-architect-contractor

-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시장으로는 인도, 중국, 중동의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음.
- 특히 인도는 인도 건설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업을 위한 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을 갖춘 지역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음.
- 유가 상승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시장은 괄목할 만한 호황을 맞이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동향

- 2004년 해외 설계분야 200대 기업순위 안에 진입한 국내기업은 3개 기업으로 매출액 합계 51.9백만 달러로 전체 해외시장 매출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개 기업이 순위내 진입하여 매출액 합계 34.4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0.16%의 해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던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임.
- 2004년 중국은 13개 기업이 249.8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해외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15개 기업이 922.0백만 달러의 매출로 3.8%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가장 큰 해외시장 점유율을 보인 국가는 84개 기업이 순위내 오른 미국으로 42.8%의 점유율을 보였음.

해외사업 매출에 따른 상위 200대 설계사 중의 국내 기업

순위			회 사 명	회사 형태	2004년도 매출 (백만 달러)	
2004	2003	2002			해외 매출	총매출 중 해외 매출(%)
87	79	**	HYUNDAI ENGINEERING CO. LTD., Seoul, S. Korea	EC	26.8	29
113	**	**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Seoul, S. Korea	EC	17.4	49
158	170	150	DAEWOO ENGINEERING CO., Seongnam City, S. Korea	EC	7.7	11

- **: 200대 기업 순위내 없는 기업.

- 한편 KOPEC의 해외 매출액은 1.8백만 달러로 해외시장 부문의 순위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국내 매출을 포함한 총매출액은 185.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자국내 매출을 포함하여 선정한 150대 기업순위에서 87위에 오름. 해외시장 부문의 87위인 현대엔지니어링은 150대 기업 순위에서는 총매출액 92.4백만 달러로 150위에 오름.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성유경(연구원.sungyk@cerik.re.kr)

「건설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현실 반영해야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는 대단히 나쁘다. 지금도 대전시 6급 공무원의 건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떠들썩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건설업계의 영업이나 현장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건설법」의 골자는 건설업체 임직원이 건설공사 도급 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분야의 부패 척결은 필요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떤 건설업체가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거나 뇌물수수에 개입한다면, 당연히 그 업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사 차원과는 무관하게, 예컨대 어떤 현장소장이 본사 몰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뇌물수수 행위를 했더라도, 개정 법률에 따르면 최장 1년간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때도 관련 행위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처 장관이나 해당 부처 자체를 함께 처벌하자는 주장도 가능하다.

처벌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실상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서, 비단 발주처 공무원과 건설업체 임직원간의 뇌물수수만이 아니라 하도급자와 이해 관계인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공사 수주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영업담당 임직원의 뇌물수수 행위나, 본사 직원과 하도급 업체간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건설업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법률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연간 수조원, 수천억원씩 수주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개별 임직원이나 하도급자 및 이해 관계인의 뇌물수수 행위를 사유로 1년씩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강력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 비리와 회사 차원의 비리를 구별하여, 억울한 회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호(선임연구위원·shlee@cerik.re.kr)

■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규제개혁기획단’ 과 워크숍 개최

-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8. 31(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과 연구원 부원장 및 각 작업반장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개최
- 건설산업혁신위원회의 입찰제도 및 건설산업 구조조정 관련 작업반 작업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현안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진행

■ ‘대구·경북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대구경북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공동으로 9. 1(목),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와 경상북도회의 후원으로 개최
- 주제발표는 연구원의 윤영선 선임연구위원이 ‘대구·경북지역 경제와 건설산업의 역할’ ,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이 ‘대구·경북지역 주택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을 각각 발표하고,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과장 등 8명이 참석,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함.